활기찬 신동엽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55호 1판 (음력 6월 12일)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인구 유출 못막는 광주 구도심 재생

10여년 막대한 예산 투입
주민 삶의 질 고려 없이
아파트 짓기 등 재개발 치중
동구 인구 감소세 지속

광주시가 쇠락한 구도심 재생을 위해 매년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극히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오랜기간 형성된 주거지역을 철거한 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거나 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추가했음에도 구도심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이 신규 주거공간 공급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고령화, 인구 감소, 소득격차 심화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예술, 문화, 역사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주제에만 집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중심시가지재생,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기반 확충, 근린재생형 일반도시재생, 새뜰사업, 골목에서 시작하는 상생프로젝트 등 7개 분야 52개 사업에 1416억원을 투입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이 '원주민이 외곽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초래하고, 고층화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그 대안으로,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푸른길, 산책로, 광주역, 광주송정역,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구에 집중돼 있다. 동구는 주택재개발 16곳,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2014~2017),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2014~2017)에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있는 상태다.

이들 가운데 학동 3구역과 월남지구가 최근 준공돼 입주했다. 공급 세대만 3410세대에 달한다. 300억원이 투입된 광주시와 동구청의 도시재생사업도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성과가 나올 시점이다.

그러나 민관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모두 투입했음에도 동구의 인구는 계속 감소세다. 2016년 7월 9만7195명이던 동구 주민등록인구는 1년이 지난 뒤 9만6602명이 됐다.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고, 원주민 거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반시설은 물론 편의시설, 문화·예술 콘텐츠를 설치 또는 추가했지만 인구는 593명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충장축제의 성공 등으로 유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주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고려없이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이나 주민 실생활과 연관성이 낮은 콘텐츠로 접근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세민이 대부분인 원주민의 경우 높은 분양가로 인해 구도심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하고,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공원 등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으로의 이주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택시운전사' 개봉 첫날 관람 행렬 5·18 민중항쟁 소재의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한 2일 CGV 광주 터미널점을 찾은 관객들이 영화 티켓 예매를 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예매율 47.2%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전 예매 티켓은 18만 7000여장, 관람객수는 8만 7000여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정부 고강도 부동산대책

서울과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관련기사 4·14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우선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부터 다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했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제시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내려간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세가 강화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태풍 '노루' 주말 제주·남부 영향…한반도 관통 가능성도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노루(NORU)가 오는 6일께 제주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전남 해안을 거쳐 내륙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2일 오후 '태풍 노루 진로 및 강도'에 관한 브리핑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일 오후 3시 현재 태풍 노루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82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9㎞의 속도로 북서진 중이다. 노루는 5일 오후 3시에는 오키나와 북동쪽 약 300㎞ 부근 해상으로 자리를 옮겨 제주도 해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 남부와 남해 동부에 태풍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우진규 예보관은 "노루가 대조기와 맞물려 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법인세 최고세율 25%·소득세 42%로 상향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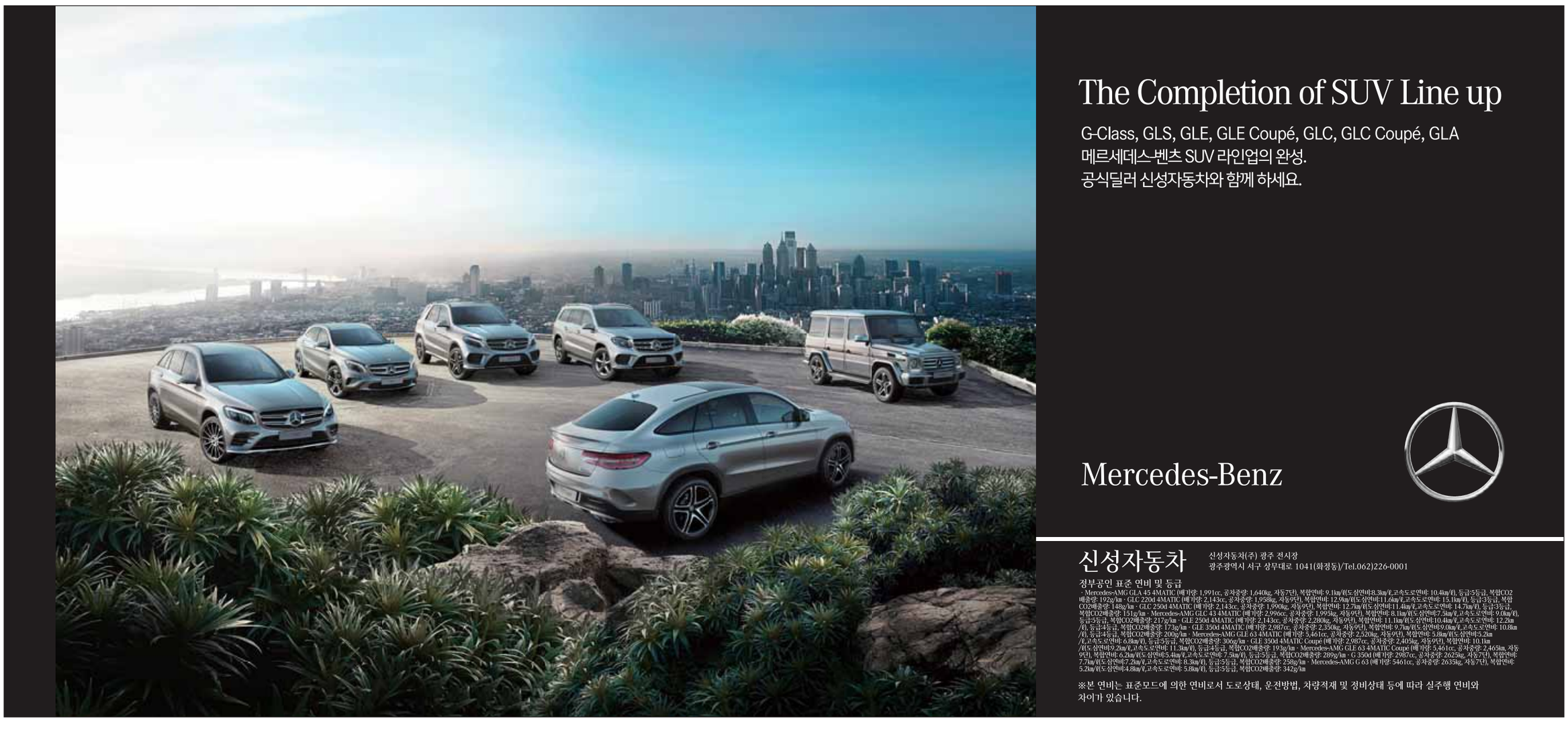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진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한 것이다.

비단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